

# “정치 논리에 놀아난 심의 결과 철회하라”

조선대 로스쿨 탈락 광주·전남 지역민 반발 확산

총동문 궐기대회·전남도의회 재배정 촉구 결의안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조선대 총동창회는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옆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조선대 로스쿨 유치 범시·도민 촉구 대회’를 갖고 “광역시·도별 1개 대학 선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광주·전남에는 최소한 2개 대학이 배정돼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적 조치는 물론 범시·도민 저항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조선대 교수·학생 및 조선대 산하 각급 학교 직원 등 600여명이 조선대 정문 인근 설립기념탑에서 1km 거리를 행진해 결의대회 현장으로 합류하면서 모두 1천여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사회를 맡은 김범태 조선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로스쿨과 관련한 어떤 법·시행령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사합격자 수가 왜 심사기준이 돼야 하느냐”며 “상식을 뛰어넘는 심사는 구속력이 없다. 심의 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동문 강종근(57)씨는 “조선대

로스쿨 탈락은 조선대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민의 문제이고, 학교를 세운 7만2천여 설립동지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논리에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정명현 조선대 명예교수 대표는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로스쿨 설치 선정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겠다”며 “로스쿨 정원은 3천명으로 늘리고 처음부터 재배정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정원조분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늘린 뒤 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원 50명을 배정받은 중앙대는 이날 하룻밤 새 정원이 줄어든 의혹을 밝히며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유치에 실패한 영산대와 선문대 역시 상경 투쟁을 벌였다. 동국대도 이날 재심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에 전달하는 등 로스쿨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증 커지고 있다”며 “이는 시·도민의 꿈과 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교육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보내는 한편, 직접 방문을 통해 로스쿨 세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도 같은 날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정원조분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늘린 뒤 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원 50명을 배정받은 중앙대는 이날 하룻밤 새 정원이 줄어든 의혹을 밝히며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유치에 실패한 영산대와 선문대 역시 상경 투쟁을 벌였다. 동국대도 이날 재심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에 전달하는 등 로스쿨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신정훈 시장 벌금형

시장직은 유지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주원)는 1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받은 신정훈 나주시 장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신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따라야 함에 따라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이유를 관시했다.

신 시장은 전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대에 MBC드라마 ‘주봉’ 촬영 세트장을 촬영하고 인근 공산면 백사리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 억울한 옥살이 5개월 어찌하나

강력법 몰렸던 고교·대학생 무죄로 풀려나

강력법으로 몰려 5개월간 수감됐던 고교생과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강신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도간강 혐의로 구속기소된 H(20)씨와 K(17·고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H씨 등은 지난해 5월 18일 밤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텔에서 귀가중인 L씨(여·26)를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뒤 자신들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한 것은 H씨 등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핸드백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H씨와 K군의 진술을 달랐다. K군은 “귀가 중 갑자기 한 여성이 달려와 ‘자 차가 갈 때

까지만 잠깐만 앉고 있을께요’라고 말했고, 이후 자취방으로 가려고 하자 ‘버리지 말아 달라’고 자취방까지 따라와 자신의 핸드백을 놓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두 사람의 자취방 옆 방에 살던 신혼부부들이 “사건 당일 누군가 조용히 두 사람의 자취방에 들어왔다가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새로운 증언을 한 것이다.

이는 ‘자취방으로 끌려가면서 한 번 살려 달라’며 큰 소리로 울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달랐다. 재판부는 결국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배 너무 어려워요”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국제결혼이민여성 40명이 1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여성발전센터 2층 강의실에서 명절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위지령기자 jrwi@kwangju.co.kr

## 학위 남발 대학 학위 강사 채용 효력 있다

광주지법 판결

‘학위남발 대학’으로 잘 알려진 미국 끔의 미국국제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일지라도 전임강사 채용 서류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병 부장판사는 1일 다른 사람의 논문을 대체해 학회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광주교대 전임강사 홍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IU 학위를 이용해 광주교대 전임강사로 채용된 혐의(위기에게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IU가 미국령 괌에 있으면서 괌 정부의 인가(approval)를 받았고, 별도로 비정부 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교사, 단순 지식 전달자 전락”

인수위 ‘영어전용교사 채용’ 교사·예비교사 강력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테슬(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소지자에게도 영어 교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5년간 2만3천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선 교사와 사대, 교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선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일지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숙고한 뒤에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5년간 ‘영어 잘하는’ 교사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어전용교사는 테슬 등 영어교육과정 이수자와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전직 외교관, 상사 주재원 등을 대상

으로 구술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영어만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광주시내 중학교 영어교사인 김모(50)씨는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인 대상의 교수와 달리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모(여·40) 교사도 “일정일단이 있겠지만 너무 성급한 것은 확실히 문제”라며 “일각에서는 회화 능력이 떨어지며 미련인 나이 많은 교사들을 끌고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한다”고 현장 교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예비 교사인 대학생들도 불만이 많았다. 광주교대 영어교육과 3학년 김규영(여·21)씨는 “영어 능력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아서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지경”이라며 “인수위가 말하는 영어를 입교육의 경우에도 대학의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영어교사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선대 사범대 영어교과 2학년 박철훈(23)씨는 “영어 교사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테슬을 이수했다고 교사로 인정한다는 계획에는 반대다”고 말했다.

전남대 이홍수(영어교과 교수) 사범대학장은 “2만3천명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천문학적인 예산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 선수 훈련하듯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인수위 교육정책 근간?

1년전 출간한 이주호의원 책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위 간사인 이주호(46·한나리당 비례대표·사진) 의원이 지난 2006년 11월 출간한 정책집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학자 폐념)가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책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밸류론 교육 공무원들은 이 책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큰 줄기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일부러 찾아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천적 한국교육정책론’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통해 이 의원은 자율 학교 설립, 교육 관정 반으로 줄이기, 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3불(不)

교육부가 담당한 수능 업무를 한

국대학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정책 방향은 책 속 ‘대입 자율화를 위한 3단계 방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00곳, 마이스터고 50곳 설립 등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도 자세히 담겨져 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4년 한나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정상필기자 camus@

MBC는 1일 “음주 방송진행을 한 임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50분 MBC ‘스포츠뉴스’를 진행하면서 방송 조반부터 부정하게 말을하고 원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음주상태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 /연현주기자 ahj@

음주 방송 임경진 아나 중도 하차



국대학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정책 방향은 책 속 ‘대입 자율화를 위한 3단계 방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00곳, 마이스터고 50곳 설립 등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도 자세히 담겨져 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4년 한나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정상필기자 camus@

MBC는 1일 “음주 방송진행을 한 임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50분 MBC ‘스포츠뉴스’를 진행하면서 방송 조반부터 부정하게 말을하고 원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음주상태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 /연현주기자 ahj@